

Issue & News

입법부 및 행정부의 ESG 경쟁력 확보 노력 확대

: 지속 가능한 ESG 투자 및 경영 환경으로의 전환 기대

입법부 및 행정부의 ESG 경쟁력 확보 노력 확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의 ‘ESG 4법’ 개정안 대표 발의와 정부의 ESG 정책 및 조직개편 등 입법부 및 행정부의 ESG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8월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조달사업·국민연금·국가재정·공공기관 운영의 책임투자 관련 항목을 수정 및 추가한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공조달 사업과 연기금 운용 및 공공기관의 경영에 ESG요소를 고려하고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다. 각 법률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ESG 4법’ 개정안 주요내용

	주요 개정사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u>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u> ~ ④ 제2항제1호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u>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u>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신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에 관한 기준 및 방법
국가재정법	→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③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6.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1. 기금의 사업 성과 2.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3.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및 자산운용지침의 준수 여부 4. 그 밖에 기금운용의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신설) 제3조의2(사회적 책임운영) ① 공공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 노력, 4. ~ 7. (현행과 같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약간의 아쉬움은 남는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ESG요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판단의 근거가 없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며, 각각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 불이익 등 제재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제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입법을 통해 공공조달 사업 및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에 ESG 요소를 고려하고 평가에 반영하도록 장려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의 경우 기금운용지침의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에의 ESG요소 반영 확대와 기금운용 평가에도 ESG요소를 반영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활동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또한 정책 제시 및 조직개편 등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3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 발표(2020년 12월)에 따른 것으로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의 전망을 제시했다.

표2.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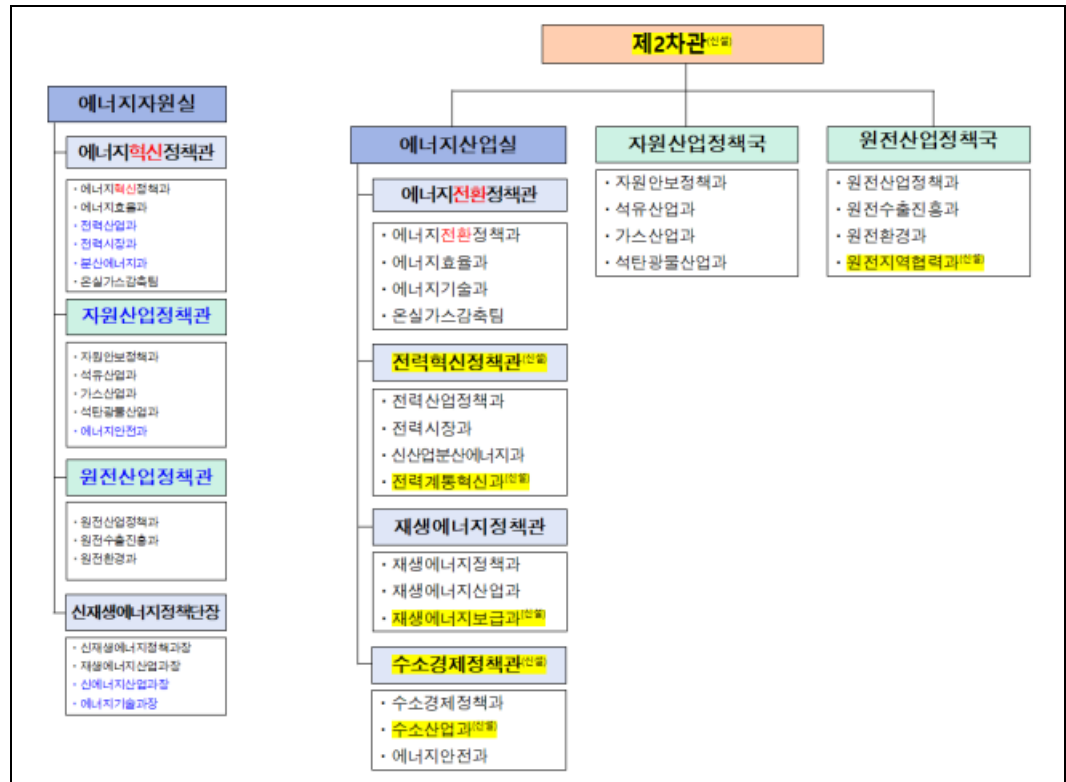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CO2eq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온실가스 순배출량 감축율(2018년 686.3 백만 톤)	시나리오 초안 주요 내용
1안	25.4	96.3%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
2안	18.7	97.3%	1안 +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
3안	0	100%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

출처: 국무조정실, 환경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번엔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최종안은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도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과 2관, 4관을 신설하고 27명을 보강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림1. 산업통상자원부 조직개편안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분야와 수소 경제 분야 조직을 각각 국장급 조직으로 확대·독립시켰고,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을 위한 과 2개를 신설했다. 특히 에너지산업실은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할 부서로 보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해 재생에너지, 수소 등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입법부와 행정부에서의 ESG 활동 확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가 및 기업경영의 중요화두가 된 ESG 경쟁력 확보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ESG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등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민간에서의 지속 가능한 ESG 투자 및 경영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중현 연구원 02-769-3768)